

부동산 정책·부자 증세 여야 힘겨루기

“집 값 폭등 보수 야당 탓” “강력한 증세 저항 부를 것” 9월 입법 ‘산 너머 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초고소득자 증세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써부터 정면충돌하면서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8·2 부동산대책과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대한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것이 보수 야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의 부동산 왜곡 현상에 반성·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하면서 또 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 ‘민생 차원의 서민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야당이 정점으로 발목을 잡으면 투기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서 결국 민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



우원식 “부동산대책은 서민 주거안정 목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세 하려면 재정지출의 효율성 따지고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없이 세금 폭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정부는 결국 국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국가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법인세를 높이면 안 그래도 국내에서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데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 여러 사람이 나눠

갖자’라는 식으로 흐르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증세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한 전체 세입 및 세출 구상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소득세를 구간 신설 및 확대 논의 하는 것은 선수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퍼 미대사 대리 “코리아 패싱 없다”

보수야당 의원 모임 세미나 참석...안보 우려 진화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3일 최근의 대북 문제와 관련,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내퍼 대사 대리는 이날 오전 보수야당 의원 모임 ‘포용과 도전’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드 배치 지연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 불발로 보수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 우려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전화에 나선 셈이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 직후 브리핑에서 “내퍼 대사대리에게 미국과 북한 간 직거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북 핵 위협이 증대됐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우산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렇게 전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에 뜻하는 ‘레짐 체인지’에 대해 윤 특별대표는 “김정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설명했고 “추가 제재를 계속하면 북한이 협상에 결국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관련, “미국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7월 4일 발사했던 탄도미사일 보다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성명 등의 반응을 보고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임시배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무력시위 및 미국의 폭격기 배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우 원내대표 등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지난달 28일 도발은 지난달 4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제재가 단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대통령 지지율 ‘주춤’

70.3%로 3.7%p ↓...국민의당 1.9%p 올라 6.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0%대 초반으로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50대 초반으로 떨어진 반면, 5주 연속 꼴찌였던 국민의당은 3위로 뛰어오르며 약진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21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3.7% 포인트(p) 내린 70.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3.0%p 오른 22.2%, 모름 또는 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잔여 사드 임시 추가 배치’ 결정, 국방장관의 국방위 발언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며 사드배치 찬반 유권자 모두 비판적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2.1%p 내린 50.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5%p 오른 17.9%였다. 국민의당은 6.8%(1.9%p ↑)의 지지율을 얻어 3위로 약진했다. 바른정당은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5.2%(0.7%p ↓)의 지지율을 얻었다. 정의당이 전주보다 1.6%p 하락한 4.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

민주 “탈원전 시대적 과제”...국민의당 “절차 없이 성급”

국회 탈원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각각 열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면 측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을 거치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면서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당장 내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 짧게는 2030년, 길게는 완전한 원전제로 국가가 되는 2070년대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인 줄리아 소콜로비츠바 씨는 측사에서 “한국의 정책이 탈핵, 에너지 전환과 같은 국민의 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국민 요구로 세계적인 탈핵,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에 함께하기로 한 한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탈원전은 장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측사에서 “지금 정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 요금 인상을 없을 것이라 결론 내리고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가지는 지위와 시스템이 무시당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에서는 절차와 방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 이자만 납부 OK! | 청약 통장 NO! | 즉시 입주 OK!

24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35PY: 방 3, 화장실 2, 주방, 거실

분양 전환 아파트 24/35PY
 분양문의 (062) 610-9232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모집기간: 2017년 8월 2일(수) ~ 2017년 9월 7일(목)
 교육기간: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welcom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8월 25일(금)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수강료: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itelong.sunch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